

신한은행 제재 수위 경감될까 . . . 신한은행도 '손실미확정' 분쟁조정 동의

서울경제

우리·기업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 오는 18일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열린 제재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신한은행이 우리은행보다 낮은 비율의 선지급 결정했으며 지난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이 신한은행보다 피해 구제 노력을 더한 점을 설명

한은 '디지털화폐' 도입 추진에…벌써 눈독 들이는 시중은행들

국민일보

한은의 디지털화폐 도입 소식에 은행권의 시장 선점 움직임이 빨라졌다. 신한은행은 8일 LG CNS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플랫폼'을 시범 구축. KB국민은행은 한은의 CBDC 설계 결과가 나오면 기술 검증과 전자 지갑 구현, 관련 파일럿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

배당 둑인 금융지주, 하반기 노린다

이데일리

4대 금융지주는 당국의 권고로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20% 수준으로 묶였지만,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끝나는 6월 이후에는 제대로 배당을 늘릴 전망.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주총에서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상정했고, 신한지주 역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안건을 준비 중이며, KB금융은 자사주매입 및 소각 계획 밝힘

막하기 전에 미리 받자'…5대은행 신용대출 이달 4일만에 1조 급증

뉴스1

3월들어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1조원 가량 급증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수요가 지속되는 데다, 3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 잔액이 늘었다는 분석

답답한 코스피에...증수의 ELS '봄바람'

서울경제

3월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2월 ELS의 발행 규모(원금 보장형인 ELB와 외화 발행 ELS는 제외)는 약 5.4조로 집계된다. 올 1월(3조 2,655억 원)보다 57.31% 급증. 코스피 지수가 3,000~3,100에 머물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한 풀 꺾인 것으로 풀이

보험사 실손보험 인상을 최고 19.6% 확정

아시아경제

국내 주요 보험사의 올해 실손의료보험 인상률은 최고 19.6%. 삼성화재·현대해상·등 주요 4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인상률은 상품 유형에 따라 평균 11.9~19.6%.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舊) 실손보험이 17.5~19.6%씩 오르고,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이 11.9~13.6% 오른 것으로 파악

손보업계 배상책임보험 수요 밸굴해야

뉴스1

보험연구원의 '배상책임보험 성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사회 재난 증가로 재난안전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면서 배상책임분야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 손해보험산업이 4차 산업 도래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배상책임보험 수요를 적극 밸굴해 의무배상책임보험 이외에 배상책임 보장영역 확대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미래에셋생명, 업계 최초 판매전문회사 출범

헤럴드경제

미래에셋생명이 업계선 처음으로 제판분리를 마무리하고 판매전문회사를 출범. 미래에셋생명은 8일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의 현판식을 진행. 이날부터 첫 영업을 시작하는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설계사(FC) 3500여명, 41개 사업본부로 구성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